

이원택 도지사 “전북 미래 먹거리 선점”

2028~29년 신규사업 조기 발굴… “내년 국가예산 확보도 끝까지 총력”

7대 SEED 프로젝트 중심 미래 성장동력 육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강조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수습주문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민생 현안 등 주요 도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이 지사는 2028~202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막비지에 접어둔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정책과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국가예산 확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서는 안 된다”며

“정부 예산안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관계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향후 10~20년 뒤 전북의 미래는 첨단기술을 얼마나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전북이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와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앵커기업과 이전 가능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전북이 국가 신성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고 주문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중요한 과제”라며 “전북의 강점과 기관별 연계성을 바탕으로 유치 논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빈집은 귀농·귀촌인의 주거공간으로, 도심 빈집은 청년과 문화예술인의 창작·거주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 원인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는 한편,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택 증증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증증장애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구매가 사무용품 구입이나 각종 용역 등 행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실·국과 산하기관이 우선구매 확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와 국가예산 확보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동시에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각 실·국과 산하기관이 많은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양질의 체류인구 관리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도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80.6%가 체류인구, 지역 활성화 핵심 자원”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24일 발표한 이슈브리핑(Vd.350)을 통해 기존 정주인구 유치 중심의 인구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주민등록인구 유치 정책이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을 실제로 방문하고 머무는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정책적 목표를 통해 유입 확대가 가능한 체류인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자료 분석 결과, 전북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의 평균 체류인구는 생활인구의 80.6%이며, 주민등록인구 1명당 체류인구 수를 나타내는 ‘체류인구지수’는 무주군(9.1), 임실군(6.7), 부안군(6.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외부 방문객 유입 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정읍시(2.6), 김제시(3.0) 등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시군 간 큰 편차를 보였다.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출인지수는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고창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평균 이하 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은 전북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북의 체류인구는 대부분 2월에 가장 적고 가을철 및 관광

성수기에 집중되는 계절성 한계를 나타냈다. 특히 임실군(358%) 순창군(278%), 무주군(276%) 등은 계절적 편차가 매우 커 특정 시기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김제시(113%)는 연중 안정적인 분포를 보였다.

계절 편차가 심한 지역은 비수기 특화 축제와 사계절 체류공간 조성을 통해 체류인구를 연중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입 경로별 특성은 전북 내 유입 비중이 88.4%에 달하는 생활권 중심형(김제시), 도내 방문객 의존도가 72%~88%인 도내 의존형(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등), 전북 유입형(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다.

광역유입형은 체류형 거점 인프라 구축,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재방문과 장기체류를 유도하고, 도내 의존형 및 생활권 중심형은 전주권 및 인근 거점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외 체류인구 방문 수요 창출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연구원은 생활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단위 체류인구 빅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군 간 공동 대응사업 발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기반 마련 등 실증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

남원시의회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정례회를 열고 남원시 인공지는 기본 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와 2025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열 의원, 조용수 의원, 양순철 의원, 전인숙 의원이 5분 자유 발언과 장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진강유역환경청 남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남원시의회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한명숙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현안업무보고, 현장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보다 1,072억원(5.96%)이 증액된 1조9,071억원이며 오는 2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는 군산의 해양주권(새만금 신항)을 유린하지 마라!’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중단과 전북도 및 정치권 의원장 중립 유지를 촉구했다.

설경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에 미칠 영향을 묻고 대응전략 및 안전장치 계획과 같은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전주서

2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최로 여는 대한민국 품질의 미래, 전북에서 한바탕 펼쳐다’를 주제로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100조 공간 열쇠는 국회에 뒀야”

혁신당 강경숙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통제 법안에 담아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100조원의 운용과 관련해 “국회의 열쇠를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통제를 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이날부터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는 약 100조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쓰는 재정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좋은 곳을 찾아, 그러나 공간간지가 열쇠까지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상당 규모의 기금 지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기금 역시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심의가 끝난 뒤에는 지출 계획의 20%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며 “공간이 커질수록 국회 문턱을 밟지 않는 돈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견제를 통해 재정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헌법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규정된 국회의 재정통

제 권한을 거론했다.

정부를 한해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미래대응기금의 첫 지출은 성장의 해택에서 소외된 분야와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금을 사용해야 국민주권정부가든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지키고 불평등 해소를 우선하는 원칙을 끝까지 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대북특별사절 임무 종료 후 활동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이춘석 의원,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보 공백, 대북정책이 방향 잃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이춘석 의원(익산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0일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종료 후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특사의 임무가 끝나면 그 활동 결과와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특사 활동의 사후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북 특사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현행법에는 활동 종료 후 국회 보고의 무가 없어 정보 공백과 국회의 대북정책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대북특별사절은 정부를 대표하는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동 결과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의료도 엄연히 국가 SOC’

민주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 등 지방에 함께 구축해야 지역소멸 문제에도 도움… 남원, 공공의료거점 구축 최적지”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교육·연구·진료·수련을 아우르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해 지방에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의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의료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 다시 건립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의료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역시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사회 기반시설(SOC)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병원 건립이나 운영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생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지방 환자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비수도권 환자의 서울 대형병원 이용은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숙박비와 시간적 기회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와 산모가 장거리 이동에 나서는 현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수도권

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을 단순한 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초의학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까지 연계되는 완결형 국가 의료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립의전원과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연계하고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지방 근무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및 정착지원 등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의료진까지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은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지역인 만큼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의 최적지로 제시했다. 기존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면 초기 인력 확보와 중복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함께 구축해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의료격차뿐 아니라 저출생과 지역소멸,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